

‘부산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국가균형발전 시금석”

李정부 ‘해양수도 완성’ 공약 추진
특례·인센티브 추가논의 필요성과
해수부 조직 강화 미반영 지적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부산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등 핵심 과제는 반영되지 않아 한계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건물.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이 름도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경제계도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상의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단순한 특정 지역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과 제도적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상의는 HMM 등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특별법의 성과 핵심으로, 기업 이전의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특례 및 인센티브 법안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단체는 “그동안 해양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가 수도권에 머무르면서 현장인 부산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

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해양 행정의 불합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을 넘어야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 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환경 입장과 별개로 특별법 후속 대책과 해수부 조직 강화 및 확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담겼다.

대표적으로는 ▲해수부 기능 통합 및 제2차관 신설 ▲대통령실 해양비서관 조속한 임명 ▲해양 공공기관 부울경 전면 이전 ▲대형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유도 ▲해사법원 부산 본원 설치 ▲동남권 해양·산업 금융 플랫폼 설립 ▲북항 55보급창 이전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부터 임시청사로 부산 이전을 추진해 오는 23 일께 이전을 마무리하고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 /고창군

고창군

1500여곳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500여 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게 된다.

군은 내년 국비 12억6000만원을 확보해 430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결합해 설치하며, 설치비의 최대 88%를 지원하고 군민 자부담률을 20% 이하로 낮춰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영광군, 해상풍력 전진기지 구축 속도

11GW급 해상풍력 프로젝트 뒷받침할 전용 항만 조성 구상

전남 영광군이 해상풍력 전진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영광군은 항화도 어촌계와 대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지역산업 연계 방안’ 기본계획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11GW(기가와트)급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용 항만 조성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영광군 관할 해역과 EEZ(베타적 경제수역) 일대에서는 총 17개 사업자가 약 1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능되기 위해선 유지관리(O&M) 거점 항만이 필수적이다.

영광군이 항화도항 인근 20ha 부지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 현장.

에 ‘유지관리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이유다.

클러스터에는 ‘O&M(운영·유지보수) 지원시설’, ‘CTV(승무원 수송선) 접안시설’, ‘인증·교육센터’, ‘홍보·체험관’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한데 묶는 핵심 기능들이 포함된다.

영광군은 이를 통해 항화도가 전남 북부 해상풍력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대구시, 어르신 4만5174명에 일자리 제공

내년 2243억 투입

대구시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418억원을 증액한 2243억원을 투입해 총 4만517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량활용사업’, 카페 및 음식점 운영 등 ‘공동체 사업단’, 지역 환경 개선 및 학교 급식지원 등 ‘공익활동사업’,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모집인원은 역량활용사업 1만2850명, 공동체 사업단 2306명, 공익활동사업 2만8937명, 취업 지원 1081명이다. 특히 ‘역량활용사업’은 올해보다 4367명 증가한 1만2850명으로, 51.5% 대폭 확대됐다. 이 사업은 신노

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60세 이상, 월 60시간 근무에 63만4000원(주휴수당 별도)의 급여가 지급된다.

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일 3시간 이내) 근무하고 29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 일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12월 1일부터 구·군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나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김강식 기자 presskim@

부산항만公社 “부산항, 세계 4위 항만 선정”

메는 이코노믹스 공동발간 보고서

부산항이 전 세계 4위 항만에 선정,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세계 최대 선급기관이자 글로벌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DNV)과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분석 특화 연구기관인 메는 이코노믹스(Menon Economics)가 공동 발간한 ‘세계 선도 컨테이너항만 보고서 2025’에서 부산항이 세계 4위 항만으로 선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은 전 세계 160개 컨테이너항만을 대상으로 한 평

가에서 생산성, 연결성, 지속 가능성 등 의 부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상하이, 낭보-저우산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부산항을 ‘중국, 일본,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핵심 연결축이자 1차 환적 허브’로 정의했다.

초대형 선박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운영 체계가 강점으로 꼽혔다. 자동화 시스템과 체인 포털 등 스마트 항만 기술이 항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강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대응 지시

영일만횡단고속도로 등 증액 건의

경북도는 국회 예산심사 법정시한(2일)을 앞두고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상황을 종합 점검하며 전 실·국에 총력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을 국회 증액의 분수령으로 보고,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국회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전 직원에게도 국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정

부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와 소통을 강화해 증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국회에 증액을 건의한 주요 사업은 ▲영일만횡단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1715억원 ▲APEC 레거시사업 ‘문화의 전당’ 14억원 ▲산불피해지 피해복원 별채 300억원 ▲산불피해 공동체 회복 거점센터 건립 사업 70억원 ▲산림미래혁신센터 조성 4.5억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억원 등이다. 도는 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현장행정 강화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며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증대에 성과를 냈다.

특히 ‘콩애뜰’ 논농산업 거점지구가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돼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국산콩 산업 기반을 갖췄다.

논콩 재배면적 전국 1위를 달성한 가운데 공익직불금·전략자물 직불금 등 총 707억원이 지급돼 소득안정에도 기여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488명을 도입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도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통해 청년농 유입과 미래농업 확산 기반도 강화했다. /김제(전북)=정훈 기자